
과테말라: 포획국가에서 다민족국가로?

리카르도 사엔스 데 테하다

과테말라 산 카를로스 대학교 역사인류학과 교수

원제와 출처: Ricardo Sáenz de Tejada, "Guatemala: ¿del Estado capturado al Estado plurinacional?", *Nueva Sociedad*, No. 300, julio-agosto de 2022, pp. 88-100.

핵심어: 권위주의, 부패, 과테말라 국제 반(反)면책위원회(CICIG), 알레한드로 지아마테이, 과테말라

정국의 혼란이 가중되어 가던 과테말라에서 민주주의의 공간은 점점 폐쇄되어왔다. 2020년 1월에 알레한드로 지아마테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면책권과의 전쟁과 법치국가의 수호라는 사법 독립의 마지막 보루들이 하나씩 무너져갔다.

이 과정에는 여당 연합의 이익에 호의적인 헌법재판소의 간섭, 검찰청에 소속된 반(反)면책특별수사부(FECI)의 해체, (미국 국무부가 과테말라에서 정치적 동맹자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정치적 특혜를 받기 위해 반부패 수사를 방해하고 저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던) 검찰총장 콘수엘로 포라스의 승인, 1996년에 맺은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세워진 공공기관의 폐쇄, 그리고 최근에는 국가 유일의

고등 공교육 기관인 산카를로스 대학교 총장의 부정행위가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4년에 선출되어 3년 전에 이미 그들의 직책에서 물러났어야 했던 대법원장과 고등법원장들의 임기가 불법적으로 연기된 것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는 반(反)면책특별수사부의 전 총장들부터 학생들, 사회지도자들 그리고 원주민 통솔자들을 거쳐 신문 기자들에 이르기까지 반대자들의 범죄화로 이어졌다.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망명을 떠나야하기도 했다. 사법제도의 장악 역시 정치권에서 일어난 부패를 보편화시키고 안보 지표를 퇴보시켰던 반(反)면책 문화로 회귀하는 원인이 되었다.

어떻게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2015년에는 사회동원의 전성기를 경험하고 오늘날에는 합법적으로 보이는 권위주의 정권의 수립에 일조한 과테말라의 지난 10년간의 정치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의 포획

2011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장군 출신인 오토 페레스 몰리나가 당선되었다. 전직 군 장교였던 그는 1980년대 초 익실(Ixil) 민족에 대한 집단학살 행위가 자행되었던 지역 내 반란군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었다. 이후, 군사정보 관련 요직들을 맡았으며 호르헤 세라노 엘리아스 정부(1991-1993)에서는 국방사령부 군사정보국장 자리에까지 올랐다. 1993년 세라노가 일으킨 국가의 친위 쿠데타에서 페레스는 위기를 타개할 법적 돌파구를 찾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국가의 주요 경제 단체들과 접촉했다. 제도주의자적인 군인이었던 그는 1996년에 케틸라 세력과 체결한 평화협정에 서명한 이들 중 한 명이었다.

2003년 그는 당시 신당이었던 애국자당(Partido Patriota, PP)과 함께 오스카

르 베르헤르를 대통령으로 이끌었던 연합 전선을 형성했다. 베르헤르의 임기 초기 몇 달 동안 그는 안보위원을 역임했다. 그는 2007년 선거에서 당시 유능한 기업가로 인정받던 리카르도 카스티요 시니발디를 러닝메이트로 하여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으나 함께 경쟁하던 알바로 콜롬과의 2차 투표에서 낙선했다.

과테말라 국제 반(反)면책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페레스 몰리나를 비롯한 애국자당의 대표 의원들은 2011년 캠페인에 자금을 조달하고 선거 비용을 치르기 위해 자금 조달 시스템을 구축했다.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이 시스템에 기여했던 라디오와 텔레비전 채널, 건설 회사 및 기타 비즈니스 그룹은 후에 각종 계약과 공공사업에 채택이 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여기서 마련된 자금은 2012년 페레스 몰리나가 대통령직에 오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전직 장교가 국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페레스 몰리나 행정부 인사들, 즉 부통령과 함께 내무부, 에너지광산부, 보건부 장관들은 공공기관을 조직적인 부패 기구로 만들었다. 그들은 그 안에서 공공사업 선정에 이유로 뇌물과 수수료를 받고 정부 조달 물품의 단가를 높이고 정부 행정 기관에서는 정치적 호의에 대한 대가로 직위를 서로 나눠 가졌으며 광산권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승인되었다. 종합해보면, 조직적인 방식을 통해 국가 예산을 약취한 것이다. 그들은 애국자당이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게끔 입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여당에게 유리한 법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투표수에 도달하기까지 한 통신 회사가 지원하는 조직적인 뇌물을 비롯하여 모든 종류의 경제적 정치적 호의의 대가를 아끼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2014년에는 국회 제1 야당인 신자유민주당(Libertad Democrática Renovada: LÍDER)과 함께 대법원장과 고등법원장들을 선출하는 일로 협상을 벌였다. 당시 룩사나 발테티 전 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이른바 “침대 협정”이었다. 호텔 방에서 각 정당의 지도자들이 상급 법원장들을 자신의 구성원들로

채웠으며, 이들은 현재까지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5년의 봄 그리고 개혁의 시기

페레스 몰리나를 주축으로 한 애국자당의 지도자들은 대통령직을 장악하고 입법기관을 종속시켰으며 사법기관은 부분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이렇게 국가 포획은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과테말라에 있는 반(反)면책위원회의 존재는 이에 방해물이 되었다. 2006년 과테말라 정부와 유엔의 승인을 받아 2008년 과테말라에 설치된 과테말라 국제 반(反)면책위원회는 범죄 수사에 유리한 제도적 변화를 이뤄냈고 검찰청에 수사관과 검사로 구성된 팀을 편성하여 비교적 비중 있는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페레스 몰리나 대통령은 일찍이 이 위원회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으면서도 이들의 업무를 평가하고 임무 연장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창단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15년 4월 16일 반(反)면책위원회 위원장 이반 벨라스케스와 검찰청장은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세관 사기 조직이 있음을 발표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여론에 파문이 일었고, 같은 날 여러 시위 단체가 대통령 관저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2015년 4월 25일 수만 명의 과테말라 시민은 면책과 부패에 맞서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중앙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상호 강화 과정이 발전했다. 시민들의 항의와 지지로 반(反)면책위원회와 검찰청의 수사는 확대되고 검사와 판사는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로 인해 적발된 새로운 사건들은 시민들의 규탄과 공분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록사나 발데티는 부통령직을 사임하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 무렵 내각 구성원의 대다수는 사임했고 부패 집단의 중심에는 바로 대통

령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8월에는 민간 부문도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파업이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페레스 몰리나는 9월 2일에 대통령직에서 몰리나 구속되었다. 부패 사건에 연루된 내각과 기타 공직자들을 해임 및 체포와 함께 수사와 재판이 진전되면서 겉으로는 국가의 포섭과 포획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중단되었다.

젊은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국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논의하고 제안하는 수십 개의 시민단체와 기관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선거 절차가 진행되면서 2015년 초에 이루어졌던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후보자들이었던 신자유민주당의 마누엘 발디손과 국민희망연대당의 산드라 토레스는 지미 모랄레스에게 선두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다. 그들을 밀어낸 지미 모랄레스는 퇴직한 군인 단체의 지원과 그 외에도, 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업 엘리트들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지원 받았던 국민통합전선((FCN-Nación)이 입후보로 내세운 코미디언이었다.

모랄레스는 《나는 부패하지도 않았고 도둑도 아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후보로 출마했는데, 이는 당시로서 매우 적절한 슬로건이었다. 정부의 수장을 맡은 그가 실행에 옮겼던 조치 중 하나는 부정부패를 청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반(反)면책위원회의 위임 기간을 2년이 아닌 4년으로 연장한 일이었다. 이후 개혁의 시대가 열렸고, 선거법과 정당법에서 불법 자금 조달에 대한 더욱 엄격한 단속과 정부 조달 물품에 있어서 조달과 계약 절차의 변경을 포함하여 정치 부패 타파를 목표로 하는 여러 법률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헌법상 법률 개혁은 제한되어 있었기에 평화협정에서 제기되어 왔던 재판 부문에 한정하여 헌법 개혁 논의가 재개되었다. 보수주의 성향의 정계와 재계 인사들은 사법제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이러한 변화에 처음부터 반대했다. 그들은 이러한 논의를 지원한 반(反)면책위원회의 개입을 비난하고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원주민 권리의 인정을 이용했다.

반(反)면책위원회와의 전쟁

2015년 상반기에 반(反)면책위원회와 검찰청의 수사가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운영하던 정부 내 부패 조직들을 급습했는데, 이 사건의 여파로 이어진 후속 수사를 통해 이 조직들에 기업 그룹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건설과 부패”와 “국가의 포획” 사건들로 인해 건설 회사, 은행, 금융 기관과 그 외의 또 다른 회사들이 불법적인 정치 경제 네트워크로 특징지어지기 시작한 것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부패와 반(反)면책과의 전쟁에 대한 지원이 재조정되었다.

“건설과 부패” 사건의 뇌물 수수에 관한 수사 중 하나로 보수적이고 친기업적인 시민단체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압류된 문서에서 국내 주요 기업 그룹들이 2015년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모랄레스 대통령 측의 이익을 위해 미신고 자원을 모아 동원했던 작전이 발견되었다. 글로벌 비즈니스 그룹 중 한 기업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한 관계자의 증언으로 불법 자금 조달이 확인되었다. 반(反)면책위원회가 지배 계급 과두 정치의 핵심에 도달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반(反)면책과의 전쟁에 영향을 받은 그룹들은 당시 부패 사건에 가족 구성원이 연루되었던 대통령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반(反)면책위원회에 맞대응하는 특별 동맹을 구성했다. 전 현직 공무원들, 부패 혐의로 기소된 개인들, 퇴직한 군인들, 다양한 계층의 사업가들, 범죄 단체와 일부 언론 매체는 위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새로운 국제 정세 속에서 이들 비즈니스 그룹

은 반(反)면책위원회를 과테말라의 반정부 인사들을 감시하려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도구라고 비난한 미국 내 로비 사무실에 자금을 지원했다. 과테말라의 외교는 부패와의 전쟁을 공격하고 위원회의 권한을 빼앗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상황은 점점 극에 달해 무장한 군용 차량들이 반(反)면책위원회 본부 앞에 배치되었고, 이반 벨라스케스 위원장은 비호감 인물로 지정되어 출국 명령을 받았다. 비록 이 콜롬비아 법학자를 추방하려던 시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막혔지만, 그는 출장을 다녀온 후 과테말라로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

면책에 찬성하며 구성되었던 특별 동맹은 반(反)면책위원회의 임기 종료를 앞당기는 일에는 실패했지만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데는 성공했으며, 2014년 “침대 협정”에서 임명되었던 판사들은 기소를 중지시키기 시작했다. 60개 이상의 범죄 조직을 적출하여 기소하고, 고위 공무원, 기업인, 정치인들을 재판에 넘겼던 반(反)면책위원회의 임무가 2019년 9월에 종료되었다. 이 조직은 검찰청 강화에 기여했으며, 무엇보다도 권력자들 역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2020년 1월 14일에 임기를 마친 모랄레스는 그날 저녁 시위대의 항의와 그들이 던진 계란 세례 속에서 중앙아메리카의회 의원으로 선서했다. 중앙아메리카 의회는 수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임시 회의를 열어 그에게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부여했다. 그가 지냈던 대통령직이 남긴 유산은 특권과 면책권을 지키기 위해 마피아 조직들을 이끌고 2015년에 시작된 개혁의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었다.

보수주의의 반격

과테말라 국제 반(反)면책위원회가 해산되자, 면책 찬성 연합은 지난 몇 년간

진전되었던 상황을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법제도를 완전히 장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들의 반대 세력을 거리낌 없이 박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지아마테이 대통령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지아마테이는 네 차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는데, 모두 다른 정당에서 공천을 받았다. 공무원으로서 그의 경력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바로 그가 베르헤르 정부(2004-2008) 시절에 교도소장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이다. 그가 국가 교도소의 책임자로 있는 동안 공작 작전이 수행되었으며, 파본(Pavón) 지역 교도소의 통제권을 되찾는다는 명분으로 특별 사법 처형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으로 현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받았지만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를 대통령 후보로 공천한 세력인 바모스(Vamos)는 최근에 창당한 정당으로, 대량학살을 일으켰던 독재자 에프라인 리오스 몬트의 딸 수리 리오스와 전 법무부장관이자 진보정당인 세미야(Semilla)의 텔마 알다나와 같은 여성 후보자들이 없었던 1차 투표에서 15%의 득표율을 얻었다. 이들은 유권자 의향이 가장 높은 후보들이었으나 자격을 박탈당해 1차투표에 출마할 수 없었다. 지아마테이는 투표자의 85%가 선택한 첫 번째 후보는 아니었다. 그러나 2차투표에서 국민 희망연대당에서 다시 후보로 지명되어 1차 투표에서 25%를 얻은 산드라 토레스 후보를 압도했다.

지아마테이의 정당은 소수 의석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특혜를 바탕으로 의회 의장직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입법연합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전으로 정부 연합의 이익에 유리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검찰과 고등법원의 지원을 받아 반대파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수 개월간의 박해 끝에 2021년 7월에 콘수엘로 포라스 법무부 장관은 반(反)면책특별수사부의 프란시스코 산도발 검사를 해임했다. 이후 산도발 검사는 강제로 출국해야 했다. 이는 판사와 검사 그리고 전직 반(反)면책위원회 관리들에 대한

사냥을 시작하려는 신호탄에 불과했으며, 이들은 거짓으로 기소되었다. 이 글을 쓰는 현재, 비르히니아 라파라 전(前) 반(反)면책위원회 검사는 허위 고발로 100일 이상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며, 나머지 관리들은 대부분 과테말라를 떠났다.

언론인,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 원주민 지도자, 학생 그리고 활동가들은 형사 처벌과 기소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 글의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2014년에 선출되었던 재판관들은 30개월 전에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주도하는 중심세력으로서 여전히 그 직위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부와 결합한 연합[세력]이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의회는 비정부 기구(NGO)의 법률 개정과 같이 이러한 단체를 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법정대리권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권리들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시도와 함께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고 어떤 이유로든 낙태를 불법화하려는 가족법이 승인되긴 했으나 이후 보류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불투명한 목적으로 그리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의원들과 공무원들을 풍요롭게 하고 2023년 선거 캠페인 자금 조달을 위한 자금 주머니를 이루는 대출과 예산 조정이 승인되었다. 비즈니스 엘리트들은 부패 정치인들과 범죄 구조가 공존하는 이 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비록 일부 기업가 연합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긴 했지만, 그들은 이러한 특권을 잃기 전에 이 불법 네트워크에 국가를 넘겨주기로 선택했다.

이들 연합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걸었던 첫 번째 담론은 세계주의 이데올로기와 젠더 이데올로기에 맞서고 이성애 규범성을 강요하는 극보수 기독교에 호소하는 종교성이었다. 여기에 시대를 거슬러 반대자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어떤 형식으로든 사회 개혁을 거부하며 냉전의 정령을 깨우는 반공주의 담론이 더해졌다.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차이로》라고 부르는데, 이는 멕시코에서 구어체 유래한 용어로 좌파와 진보주의자들의 이질적인 전통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단어이다. 이 이데올로기적 충돌의 세 번째 요소는 국제 사회가 시민 박해, 인권 침해, 부패를 규탄할 때마다 외국의 개입을 거부하고 민족주의에 호소하는 기회주의적 반제국주의다.

그러나 민주적 기관을 장악하고 법치를 전복시키는 이 모든 과정은 준법의 외피를 입고 진행되었다. 과테말라 외교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로 인해 정권의 권위주의적 회귀를 지적하기 매우 어려웠으며 해외에 설명하기도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의회, 미주인권위원회 그리고 미국 정부는 모두 과테말라 사법 제도의 몰락에 대해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세 정부가 내세웠던 최우선 과제는 면책과 부패를 예방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는 COVID-19의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과로 악화된 과테말라 시민의 생활 조건 악화를 초래했다.

국내 및 국제 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한 실제 소득 감소와 일자리의 감소를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여기에 해마다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20만 명의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무능한 경제 모델이 추가로 지적되었다. 또한, 전염병 예방 접종률이 낮고 만성 및 급성 영양실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2년 이상의 불규칙한 학교생활로 인한 교육 분야, 특히 공공 분야에서도 심각한 퇴보가 확인되었다. 이 새로운 권위주의는 부패와 면책의 유지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실패했다.

저항과 대안의 구축

이처럼 공격적인 권위주의에 맞서 정치적이고 조직적 대응책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자치권의 요구나 자치 체제의 실천과 같은 일부 요구들은 2015년 위기가 있기 전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반면, 성의 정치와 같은 다른 요구들은

새로운 불화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사회부터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국가의 포획에 직면하고 있었다.

먼저, 오늘날 과테말라는 사회적으로 항의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과테말라 경찰청의 보고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물이나 공공 서비스, 노사 갈등, 국방 관련 사항, 인프라의 부족 및 기타 여러 가지 이유와 요구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매일 국지적인 시위가 벌어진다. 이러한 시위는 농민과 노동조합처럼 전통적인 사회 조직과 운동도 포함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발적이고 국지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이들 운동은 아직 서로 합의점을 연결하고 조율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시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두 번째로, 시위와 정치적 행동 부문에서 사회적 리더십의 변화가 목격된다. 지난 10년 동안 시민 사회의 반대 세력의 무게 중심은 원주민과 그들의 권한, 페미니스트 단체, 다양성과 성적 이질을 위한 단체와 청년 단체 쪽으로 옮겨갔다. 이러한 변화의 한 예로 2021년 7월 토토니카판(Totonicapán)의 48개 칸톤(cantón) 구획 당국과 솔롤라(Sololá) 시 당국 그리고 신카(Xinca) 의회가 소집한 다민족 파업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2015년과 다른 점은 이 파업의 제안이 중앙에서 주변부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원주민 지역에서 시작되고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이전 권력 기관에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원주민들은 항상 그들의 지역에서 리더십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사실, 수 세기 전부터 이 국가의 많은 지방 자치 단체에는 정치 체제의 변화, 내전 그리고 대부분의 토착 지방 자치 단체의 공식 지방 자치 정부가 원주민 단체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던 토착 자치 정부가 존재해 왔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당국은 인정과 권위 그리고 국민에게 더 밀착된 형태의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해 왔으며, 많은 경우 헌법상의 인정을

받기도 했다.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이와 같은 변화는 이 권한이 국가적 차원으로 이동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그에 대한 한 예로, 유엔 과테말라 국제 반(反)면책위원회를 옹호하는 데 있어 원주민 당국의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48개 칸톤과 솔롤라 원주민 지방 자치 단체 그리고 신카 의회가 국내 및 국제적인 참고 기준이 되었다.

이 새로운 역학 관계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과정은 국가의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진 토착 당국과 정부의 재구성이었다. 채굴 기반 프로젝트에 맞서 북부 우에우에테낭고(Huehuetenango)의 다민족 정부 또는 신카 의회와 같은 토착 자치 단체가 구성되고 재건되었는데, 이는 조직의 전통적인 형태,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구축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형태에 대한 호소가 국방과 지방 거버넌스의 발전 모두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여줬다. 이러한 과정은 다른 지역사회에서도 이어졌는데, 특히 익스칸(Ixcán)에 있는 로스 코포네스(Los Copones) 지역이나 일부 솔롤라, 치키물라(Chiquimula) 그리고 다른 주의 경우 토착 자치 체제가 (재)구축되고 있다.

이전 권력 기관에 대한 국가적 인식과 자치 체제 형태를 재구성하는 과정도 당국과 국민 간의 동맹과 협의를 구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다국적 과업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다른 정치가들보다 더 합법적으로 입장과 제안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원주민 당국과 조직들의 국가적 리더십은 현재의 국가를 다민족국가로 전환하려는 정치적 제안을 수반했다. 1996년 평화협정 이후 국민의 집단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는 데는 헌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원주민 문제를 포함하는 헌법 개혁 시도가 있을 때마다 그에 반대하는 보수세력이 동원되곤 했다. 이에 맞선 국민과 단체들의 전략은 개혁이 아닌 새로운 헌법을 위한 투쟁하는 것이었다.

과테말라 서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채굴주의에 대항하는 지역사회의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서부민족위원회(El Consejo de Pueblos de Occidente: CPO)는 2014년에 《정치 프로젝트. 과테말라를 위한 새로운 국가: 다민족 민주주의와 원주민 자치 정부》라는 문서를 발표했다. 거기에서 “참여적, 대의적, 다민족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국민이 총선의 대상이 되는 지역 및 공공 기관에 자신을 대표하고 스스로 통치하며 총선거의 대상이 되는 영역과 공공 기관에서 그들의 권한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는 새로운 정치 헌법의 필요성을 전개시켰다. 그리고 다민족 민주주의는 토착민들이 국가 통합을 보완하는 자치 정부를 구성하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스스로 발전을 결정할 수 있는 토착민의 존재와 자유에 기초해야 한다.

동시에, 농민개발위원회(Codeca)는 2016년에 “과테말라: 다민족적이고 민중적인 제헌의회 구성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제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그들은 국가 조직의 제안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독창적이고 다민족적인 민중 제헌 의회》의 방향성을 나타낸다.

이 제안은 농촌개발위원회(Comité de Desarrollo Campesino: Codeca)의 정치-선거 조직인 인민해방운동(MLP)이 관여했으며, 이 조직은 2019년 대통령 선거에서 1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4위를 차지했다(솔롤라, 토토니카판 및 치말테낭고(Chimaltenango) 지역 등 대부분 원주민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민족 제헌 의회의 제안은 선거 캠페인의 핵심이었다. 토착민들의 정치적인 조직화 과정은 다민족국가에 대한 개념적 발전과 논쟁을 아우른 것이었으며, 이는 오늘날 이들 그룹의 담론과 제안의 일부가 되었다.

또 다른 운동은 여성, 다양성, 제도화되지 않는 성에 관한 영역에서 강화되고 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성 정치가 새롭게 설정되고 있는 현상과 일치한다. 성교육, 신체에 대한 권리, 결정권을 위한 투쟁은 전통적인 여성 운동뿐만 아니라 가족법을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고 다양한 투쟁의

현장마다 함께했던 이러한 새로운 운동들을 포괄하였다. 산드라 모란과 같은 페미니스트 지도자들은 그들이 여성의 제한권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표현되는 헌법적 변화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러한 운동을 명확히 표현하는 작업을 한다.

최근 과테말라를 통치하는 부패 네트워크 연합이 국가를 점령하면서 법무관, 시민 사회 조직의 지도자,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과 젊은이들이 망명하거나 투옥되었다. 이것은 “2015년 봄” 이후 진보 부문이 패배를 누적했을 뿐이라는 생각에 빠져 낙담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많은 이들은 그것이 반(反)면책위원회가 있기 전보다 더 나빠졌거나 더 나빠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국가의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와 새로운 운동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이다. 제헌의회의 제안은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서 널리 논의되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는 과테말라 사회가 오랫동안 질질 끌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부패세력에 포획되었으며 실패를 거듭한 현재의 단일 민족 국가에 중지부를 찍는 다국적 국가 건설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 제안은 다른 도시 활동가들과 동맹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 원주민 조직의 네트워크를 통해 힘을 얻는다.

이 논쟁의 다음 에피소드는 2023년 선거로, 불법 정치 및 경제 네트워크 연합은 야당 후보들과 세력을 불법화하는 등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고 할 것이다. 그동안 진보세력과 대중은 정치적, 선거적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치 프로젝트를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도란 옮김